

4. 중기재정계획(1999~2002년)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

□ 중기재정계획 작성의 배경과 의의

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목적으로 3~5년 정도의 多年度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의미

- **(정의)** 단년도 예산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각 하에 국가발전의 비전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3~5년 정도의 다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의미함
 - 중기재정계획에는 계획기간 중 정부가 예상하는 주요 거시지표와 이를 근거한 세입 계획과 세출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며, 부족한 세입 하에서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한 정책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
 - 따라서 향후 4년간의 정부 정책방향을 조망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음
- **(배경)** 현 경제위기로 인해 향후 당분간 지속될 재정적자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생김
 - 또한 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
 - 선진국의 경우도 재정적자를 철저히 관리하고, 공공부문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고자 중기재정계획을 도입했으며, 그 결과 재정적자 축소에 기여

□ 주요 내용과 특징

2006년부터는 흑자 재정으로 전환시키고 2015년까지 국채발행 잔액을 상환할 계획.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은 '경상성장률 - 2%p'로 유지하되 부문별로는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

- **(재정 운영의 목표)** 2006년부터는 흑자 재정으로 전환시키고 2015년까지 국채발행 잔액을 완전히 상환할 방침
 - 이를 위하여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증가율의 상한제를 도입하여 경상성장률 보다 2%p 낮게 유지하기로 함
 - 또한 조세부담률은 1999년 19.8%에서 2002년에는 21.5%로 높일 계획임

주요 경제 현안

- (세출 부문별 재정지출계획) 세출 부문별 우선 순위에 따라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내외에서 조정
 - (중점지원분야) 평균재정규모 증가율 이상으로 지원
 - ▷SOC ▷중소기업·수출 ▷과학기술·지식기반인력 양성 ▷문화·관광·정보화·환경 ▷사회복지·보건
 - (효율성제고 및 구조조정 분야) 평균재정규모 증가율 이하로 지원
 - ▷농어촌 ▷교육(지방교육재정) ▷국방 ▷외교·통일 ▷인력행정 관리
 - (한시적 지원분야) 실소요 반영하여 지원
 - ▷금융구조조정 지원 ▷실업대책

<중기재정계획(1999~2002)>

	1999	2000	2001	2002	연평균
경상성장률(%)	4.2	7.8	8.9	9.0	8.6
가용재원 (A)(조원)	71.4	77.4	84.1	94.2	81.8
조세부담율(%)	19.8	20.5	21.0	21.5	20.1
1인당 조세부담액(만원)	187	207	229	253	219
세출증가율 (%)	5.2	6.5	6.0	6.0	6.1
세출규모(B)(%)	84.9	90.4	95.8	101.5	93.2
부족액(A-B) (조원)	13.5	13.0	11.7	7.3	11.4
적자/GDP(%)	△5.1	△4.5	△3.7	△2.6	△3.9

자료: 기획예산위

□ 평가와 개선 방안

중기재정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수추계의 정밀화와 지출 계획의 구체성 확보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

- (평가) 정부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중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
 - 특히 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 방안과 조세 공평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혁 방안들은 기존 공공부문 비효율성 제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됨
 - 그러나 2001년 이후 실질성장률을 5% 이상으로 보는 등의 낙관적 거시 전망 하에서 이 같은 계획들이 제대로 수행될 지는 의문시됨

- 또한 현 중기재정계획은 구속력이 없어 이의 실제적 준수여부가 불투명하여 홍보차원의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
 -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로 결정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는 계획과 실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
- (개선방안) 중기재정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출과 재원조달을 연계한 보다 신축적이면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
 - 경기상황을 몇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이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방안이 될 것임
 - 특히 세수 전망은 중기재정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므로 이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세수추계모형의 정밀화와 민관 합동의 假稱 “세수추계위원회”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또한 적자재정의 고착화를 우려하여 경기상황에 상관없이 소폭의 재정적자만을 고수할 경우 오히려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적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축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
 - 또한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은 각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도 연계되어야 하는데,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차원의 중기재정계획의 수립도 요구됨

□ 기업에 대한 시사점

- 계획기간 중 중점 재정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SOC의 민자참여, 환경 및 문화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부문에 대한 사전 사업성 분석이 필요할 것임
 - SOC투자는 계획기간 중 연평균 10%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, 민자유치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투자수익률을 현재 13%에서 18%로 높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사업성 분석이 필요
- 조세기반의 확대를 위해 정부는 2000년 이후부터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므로 에너지 저소비형 설비 투자가 필요하며, 에너지 저소비형 설비의 자체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사업상 관심이 필요
- 문화·관광산업은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

(박 용 주 yjpark@hri.co.kr ☎724-4033)